

에코융합섬유연 서울기업 특혜 ‘파문’

10년간 지속적으로 서울에 본사를 둔 특정 기업에 박람회 참가 비용 지원
김대중 도의원, 행감서 “전북 섬유기업 지원 사업 취지 어긋나… 책임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11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하 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추진하는 ‘전북형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서울 A기업에 10년간 지속적으로 박람회 참가 비용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북형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섬유제조 기업의 신소재 개발 및 산업 전환지원을 통한 개발소재·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프리뷰 인 서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



여 도내 섬유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사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히 ‘전북 소재 섬유 관련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지인 A기업은 올해까지 10년동안 박람회 참가에 매년 선정되었다.

김 의원은 A기업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업의 주소

지가 서울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A기업의 익산지사의 현장 확인 결과 법인 지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생산공장이 아닌 A기업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대중 의원은 “서울에 있는 A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 도내에 전북지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연구원과 매년 평가위원들은 해당 기업의 기본적인 소재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만호 기자



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 소통 간담회 전북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전북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 및 시군지회장과 보육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 맞춤형 보육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도지사, 신은옥 전북도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과 시군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적격 업체와 교육용 범용 SW 용역 계약… 무효 가능성”

진형석 도의원, 전북교육청에 “명확한 해명·철저한 조사를”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축 및 플랫폼 연동 용역”에서 입찰 공고의 핵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방계약 절차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해당 용역 계약이 원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8월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4건의 SW 용역 계약(사업비 39억으로 낙찰액은 약 30억)에서 명백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며 “해당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입찰 자격요건인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 미제출이다. 전북교육청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준에는 “모든 교육용 S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사업자 환경에서 운영해야 하며, 인증서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제출된 인증서는 SaaS가 아닌 IaaS 인증서였으며, 이는 평가 기준상 필수 제출증빙 미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이다.

이로 인해 4건의 교육용 SW 용역 계약 모두가 부적격 업체와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원을 이유로 사업비 4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했다. 그러나 2025년 재추진 시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낙찰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차액을 처리한 방식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SW 보급사업 잔액을 2학기 AIDT 구축료로 전용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명시이월 예산은 본래의 목적 외 전용이나 용도 변경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명시이월 예

산은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 전용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가 강하게 의심되며, 차액이 정확히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글쓰기 첨삭 SW 용역을 수주한 00업체는 생성형 AI, 글쓰기 첨삭, 그래픽 세팅 등 3개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모두 “동일 투입율(약 84%)”을 적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가 입찰 공고 이전 내부 문서(2025.6.4. 시행계획안)에서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입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내부 정보 활용 등 부정당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진형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공공의료 신뢰 회복·사회서비스 균형발전 주문

도의회 농복환위, 군산의료원·전북사회서비스원 등 대상 행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의료 신뢰 회복과 사회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을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

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의 두 배에 달하는 60.2%로

의료 질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의수의 감소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임대료 감정으로 수익이 줄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장기재직 휴가 도입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농업현안·전북 핵심사업 예산확보 필요성 강력 제기

민주 이원택 의원,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단지 구축
전북 콩 융복합단지 추진·새만금항 신항 항로준설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해양수산위)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도내 농어민의 삶을 좌우할 농업현안과 지역 핵심사업의 예산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이 의원에게 따르면, 최근 진행된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의 삶을 좌우할 주요 농업 현안과 지역 핵심사업의 예산확보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는 것이다.

우선 이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전북을 K-푸드 중심지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최근 연구용역이 완료된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단지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주체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출지원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수출관련 물류체계 정비와 인증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국가정원의 신속한 추진,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 절감을 위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조성 등 새만금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가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콩 수매예산 2만톤을 추가 반영하고 도내지역 콩 융복합단지 추진, 심화되는 농업재해 대응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신속추진 및 신규지구 지정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새만금산업입주기업의 2026년 본격 가동으로 증가할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부지 매립 및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한 새만금항 신항 항로준설 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조했다. 또한, 연간 16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격포 여객선터미널의 노후시설 개선 및 신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산량 2위에 김산업 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업경쟁비 급등과 소득감소에 따라 농가의 생계와 농업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의 2배 확대를 위한 직불금 현실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재개, 4대 생황개선회 등 지원 복원 등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미흡하게 반영된 농업 현안들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의 조기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며 “이번 예산심의에서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먹거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전북 농업현안 해결 ‘선봉장’ 입증

민주 이원택 의원, 신동진비 보급종 중단 방침 철회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약속·농업민생 4법 통과 주도

전북 농업현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 최근 농업축산식품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신동진비 보급종 중단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의원의 꾸준한 문제제기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신동진비는 생산단수 산정 과정의 오류로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돼 2027년부터 보급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 의원은 2023년 이후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전남지역 시험값이 과도하게 반영돼 평균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됐다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또한 품종설명서, 병충해 저항성, 발맛 검사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신동진비는 전북의 대표 브랜드이며 지역경제의 상징”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 식품자원개발부의 수인 잔류계획 전면 철회도 이끌어냈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드러

난 해당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며 부담성을 바로잡았다.

오랜 기간 지연됐던 농협케미컬 전북 이전 문제 역시 이 의원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 해법이 마련됐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이 “3단계 전북 완전이전”을 공식 약속하면서 이전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입법 성과도 두드러진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업민생 4법과 한우산업지원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며 농업인의 권익과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전북의 각종 농업재해 대응에서도 중심 역할을 해왔다. 벼 이삭도열병, 벼멸구 피해,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류 피해 등 현안마다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며 농업 현장의 ‘지키는 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의회 정례회 개최… 내달 11일까지, 내년 예산안 심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31일간 열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분회의에서 김두래 의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신속집행 제도가 지방행정을 속도 중심으로 왜곡시키고 자율적 재정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건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대체부지 찾느라 수년째 허비
김동구 도의원, “전반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1일 열린 자동차용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은 2022년에 선정된 이후로 실증지원연구센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2026년 사업 완료인 상황에서 실증지원연구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 부지는 당초 새만금 관공안배소로 해수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수부가 항만법상의 이유로 새로운 부지를 찾는데 수년을 허비했다”면서, “초기 사업단계에서 해수부의 협의를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면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대체부지로 검토 중인 비응 공원 부지도 용도변경이 필요해 국토부 심의 통과 여부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토부 심의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사업이 표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구 의원은 끝으로, “이 사업은 전북의 미래 자율운송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임에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대체부지가 확정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정례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1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만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인구 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6년 정읍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시장 발전을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6년 시장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장 연설이 있었다.

제1차 분회의에서 이복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아크로웨딩홀 리모델링 사업의 재검증을 역설했고, 한선미 의원은 누리시민증 도입과 관련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해법을 제안했으며, 이도형 의원은 물탱크 실대 전수조사와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전환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12월 2일부터 12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9일 제4차 분회의에서 시정현안에 대한 시장질문 후, 12월 15일 제5차 분회의에서 2026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